

특정감사

# 감 사 보 고 서

- 재외공관 운영실태 -

2019. 2.

감 사 원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3
III. 감사 결과.....	5
1. 감사결과 총괄.....	5
2.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6
3. 처분요구사항 .....	6
(1) 재외공관장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7
(2) 한국학교 대수선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징계).....	16
(3) 재외 한국문화원 국유화사업 계약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30
(4)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 지도·감독 부적정 (주의).....	36
(5) 청사 보수 공사 계약 및 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42
(6) 청사·관저 이전 사업 관련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부적정 (주의).....	46
(7) 재해보험금 미청구 및 회계 처리 부적정 (주의).....	50
(8)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활동 부적정 (주의).....	55
(9) 재외국민 사건·사고 보고 불철저 및 영사민원시스템 등록·관리 부적정 (주의)...	58
(10) 사증발급규제자에 대한 사증발급 부적정 (주의).....	62
(11) 명예 (총)영사 추천 부적정 (주의).....	66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및 제청 부적정 (주의)...	70

# I.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그동안 재외공관 등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장기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중·소형 공관이 다수 존재하는 등 감사 사각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면서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지 한국문화원, 교육원 및 한국학교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계속 증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장기간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은 중·소형 공관 등을 위주로 회계 및 복무기강 점검 등을 통해 공관 운영의 비효율과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표 1]과 같이 주브루나이대사관 등 15개 중·소형 공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되 채용·복무관리 등 인사분야와 예산집행 등 회계분야 및 재외국민보호·사증 등 영사분야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다.

아울러 재외공관 소재지에 위치한 한국문화원, 교육원 및 한국학교의 예산·회계 집행 등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하였다.

[표 1] 지역별 감사대상 15개 재외공관 명세

(단위: 개)

구 분	공 관 명	계
아시아지역	주브루나이(대), 주동티모르(대), 주타이베이(표), 주호치민(총), 주후쿠오카(총)	5
미주지역	주브라질(대), 주도미니카(대), 주시카고(총), 주상파울루(총)	4
유럽지역	주네덜란드(대), 주이탈리아(대), 주헝가리(총),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	4
아프리카·중동 지역	주이집트(대), 주카타르(대)	2

주: (대)는 대사관, (총)은 총영사관, (표)는 대표부

###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외교부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및 국회 논의사항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2018. 9. 10.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감사인원 22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8. 10. 12.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9. 2. 21.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감사대상기관 현황<sup>1)</sup>

### 1. 재외공관 현황

외교부의 재외공관은 2018년 9월 현재 [그림]과 같이 대사관 114개, 총영사관 45개, 대표부 5개, 분관·출장소 19개 등 총 183개이고, 인력은 외교관, 주재관, 파견관 등 1,714명이며, 이를 보조하기 위해 행정직원 3,196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림] 재외공관 현황

(단위: 개)



주: 대표부는 국가 간 외교관계가 아니라 국제기구 등에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공관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재구성

2018년 재외공관 예산은 [표 2]와 같이 총 5,666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외교부 총예산(2조 2,707억 원)의 24.9%에 해당한다.

[표 2] 재외공관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인건비	2,082	2,119	2,181	2,240	2,284
운영경비	2,601	2,076	1,888	1,770	1,773
사업비 등 기타	278	1,014	1,491	1,574	1,609
합 계	4,961	5,209	5,560	5,584	5,666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재구성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 2. 외교부 현황

외교부 본부의 조직은 2018년 9월 현재 2차관, 10본부·실·관, 22국, 10심의관, 69과로 구성되어 있고, [표 3]과 같이 재외공관과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을 포함한 총정원은 2,236명이다.

[표 3] 외교부 및 소속기관 등 인력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무직	특정직	일반직	별정직	합 계
본부	3	669	237	5	914
재외공관	0	1,230	2	0	1,232
국립외교원	1	34	54	1	90
합 계	4	1,933	293	6	2,236

주: 일반직 중 시간선택제 공무원 1명 포함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2018년도 예산은 [표 4]와 같이 국제개발협력 분야 7,705억 원, 국제기구분담금 4,599억 원 및 재외공관 운영 5,666억 원 등 총 2조 2,707억 원이다.

[표 4] 외교부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국제개발협력 (코이카 출연)	국제기구 분담금	재외공관 운영	행정지원	기타	계
2015	6,751	4,406	5,209	1,607	2,650	20,623
2016	6,070	4,612	5,560	1,203	3,948	21,393
2017	7,487	4,416	5,584	1,776	2,977	22,240
2018	7,705	4,599	5,666	1,790	2,947	22,707

주: 국제기구분담금은 2018년의 경우 UN정규예산(592억 원), 유엔평화유지활동(1,682억 원), 기타 의무부담금(597억 원), 사업부담금(1,728억 원)으로 구성됨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재구성

### Ⅲ. 감사 결과

####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다음과 같이 총 1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명)

구분	합계	징계·문책 (인원)	주의
건수	15	1 (2)	14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채용·복무관리 등 인사분야

- 2016년 및 2017년 공관장 회의(매년 1회, 국내 개최) 참석을 전후하여 총 10명의 재외공관장이 외교부장관의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국내 또는 제3국에 추가 체류, 외교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또한, 위 10명의 재외공관장에 대한 휴가 승인 실태를 추가 점검한 결과 총 3명이 휴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휴가를 실시하거나 본인 스스로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

##### 나. 예산집행 등 회계분야

- ○한국학교는 대수선비 사업 예산(1억 8천만여 원 상당)을 편성·집행하면서 과다 산출한 사업비를 기초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주고, 공사대금 현금 지급 및 하자보증서 누락 등으로 회계 질서를 어지럽힘
- 외교부는 보안 유지가 필요한 외교활동을 위하여 각 공관에 배정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업무추진비, 운영비)의 집행을 지도·감독하면서
  - 주헝가리대사관 등 6개 공관에서 연간 ‘집행최저한도액’(분기별 1인당 190~850달러)을 준수한 직원이 21.6~29.3%에 불과(공관장이 전체 예산의 80.8~84.9%를 사용)하고
  -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2개 공관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데도 개인카드 및 현금으로 각각 40,842달러(전체 집행액 대비 21.2%), 10,455달러(16.5%)를 집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다. 재외국민 보호·사증 등 영사분야

- 주시카고총영사관 등 3개 공관은 주재국의 관계기관에 재외국민 수감자 명단을 요청하지 않거나 구금 사실을 통보받고도 신원을 파악하지 않는 등 재외국민 보호 업무 소홀
- 주후쿠오카총영사관 등 2개 공관은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인 사증발급 규제자(4명)에게 사증을 발급(모두 국내 입국과정에서 사증발급 규제자로 적발되어 입국 거부)하는 등 사증 발급업무 소홀

## 2.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감사 및 감사결과 처리 과정에서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직권으로 검토하여 1건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였다.

면책신청 및 직권면책에 따른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개요

관련 지적사항(요지)	신청자	처리결과	면책 인정(불인정) 사유
■ 제목 : 행정직원 신규채용 부적정 ■ 지적요지 : 외교부에서 공개채용 절차 없이 행정직원 신규 채용	직권면책	면책인정 (불문)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규정된 면책요건 모두 충족

## 3. 처분요구 사항

가. 명세 : 별첨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재외공관장 복무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외교부

조 치 기 관 외교부

내 용

### 1. 업무 개요

외교부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1조 제2항 및 제2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장이 공무 외의 사유로 일시귀국하거나 제3국에 체류하는 등 근무지(주재국)를 이탈할 때 이를 허가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휴가를 승인하는 등 공관장의 복무를 관리·감독<sup>2)</sup>하고 있다.

### 2. 재외공관장이 장관 허가 없이 일시귀국 또는 제3국 체류

#### 가. 관계법령 및 판단 기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sup>3)</sup>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

2)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외공무원의 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음

3) 같은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장 외의 공관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외공관 운영 길라잡이」(2016년 12월 외교부) III. “인사·복무” 2.) “공무 외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은 공무 외 일시귀국할 경우 사전에 외교부 본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 요청 시에는 공문에 일시귀국 사유 및 체류기간(입·출국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외교부는 매년 1회 재외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모든 재외공관에 행정 사항을 시달하여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재외공관장 회의 기간 외 체류)할 경우 외교부장관의 허가(인사기획관실에 신청)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고,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공관장들로부터 전자항공권(e-티켓)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국외여비 실비정산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9. 10.~10. 12.) 중 2016년도 및 2017년도에 개최한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주재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다시 주재국으로 복귀한 모든 재외공관장들을 대상(2016년 142명, 2017년 120명)<sup>4)</sup>으로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허가 신청·승인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1) 일시귀국 시 허가 누락 등 업무처리 부적정

2016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한 재외공관장 총 142명을 대상으로 공무 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경우 일시귀국 허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당시 7국 대사 A은 재외공관장 회의를 위한 공무

---

4) 분관장 및 사무소장, 출장소장은 공관원의 신분으로서 외교부장관의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

상 기간(2016. 3. 13.~3. 19.)<sup>5)</sup>이 아닌 2016. 3. 22.부터 같은 해 3. 23.까지 2일간 국내에 체류하였으나 해당 체류가 허가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는 등 [표 1] 및 [별표 1] “일시귀국 허가 없이 국내에 체류한 재외공관장 현황(2016년도)”과 같이 142명의 재외공관장 중 8명이 일시귀국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1] 일시귀국 허가 없이 국내에 체류한 재외공관장 현황(2016년)

구분	계	1일 체류	2일 체류
인원수	8명	5명 (ㄹ국 대사D, ㄹ총영사E, ㄴ총영사F, ㄱ국 대사G, ㄷ국 대사C)	3명 (ㄱ국 대사A, ㅇ국 대사H, ㅈ국 대사I)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외교부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재외공관장들로부터 전자항공권을 제출받으므로 항공권 날짜만 확인하면 재외공관장들이 공무상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sup>6)</sup>

## 2) 제3국(경유지) 체류에 대한 허가 관리 미흡

또한,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재외공관장들이 국내로 입국하거나 다시 주재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경유지(환승지)에 체류한 경우, 사전에 외교부 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2016년도 재

5) 2016년도 재외공관장 회의 공무상 기간은 2016. 3. 13.부터 3. 19.까지(실제 공관장 회의 기간은 2016. 3. 14.~3. 18. 5일간임)로서 그 외의 기간은 일시귀국 허가를 받아야 함

6) 2017년도의 경우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120명의 공관장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체류한 공관장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는 공관장이 일시귀국 체류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외교부 본부의 일시귀국 허가 담당자가 각 공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관장 회의 행정사항’ 공문에 함께 첨부된 엑셀 서식의 항공일정을 확인하여 회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일시귀국 기간으로 허가 결재를 상신·처리해 준 데 따른 결과임

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당시 ㄷ국 대사 J는 외교부 본부에 2016. 3. 2. 공문을 시행하여 2016. 3. 21.부터 같은 해 3. 23.까지 환승 항공편 이용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체류한다는 내용으로 제3국 여행허가 승인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3. 8.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제3국 여행허가를 받았다.

반면, 당시 ㄴ 총영사 B는 2016년도 재외공관장 회의 종료 후 주재국으로 복귀하던 중 2016. 3. 25.부터 같은 해 3. 28.까지<sup>7)</sup> 3박 4일간 경유지인 미국(로스앤젤레스)에 체류할 예정<sup>8)</sup>이었는데도 제3국 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로스앤젤레스)에 체류하는 등 [별표 2] “제3국 여행허가 없이 경유지에 체류한 공관장 현황(2016~2017년도)”와 같이 총3명<sup>9)</sup>의 공관장이 제3국 여행허가 없이 경유지에 체류하였다.

한편, 외교부는 “2항-나-1)”의 사례와 같이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재외공관장들로부터 제출받은 전자항공권 날짜만 확인하면 재외공관장들이 제3국 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경유지에 체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경유지 체류 시에도 제3국 여행허가를 받도록 각 재외공관에 지침을 시달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 3. 재외공관장에 대한 휴가 승인 등 관리 부적정

#### 가. 관련법령 및 판단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기본 연가일수를

---

7) B는 공무 외 기간인 2016. 3. 20.부터 3. 25.까지는 외교부 본부로부터 일시귀국 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

8) 위 사람은 2016년도 재외공관장 회의 전 공관장회의 주관과인 중남미협력과에 로스앤젤레스에 체류할 예정의 전자항공권(e-티켓)을 제출

9) ㄷ국 대사 C는 2016. 3. 19.부터 3. 21.까지 영국 런던에 체류하였고, ㄱ 대사 K는 2017. 12. 23.부터 12. 25.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체류하였음

최대 21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16. 1. 19. 인사혁신처 예규 제17호) 제9장 “휴가” 3. “휴가제도의 운영” 나.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절차”에 따르면 연가 등 휴가<sup>10)</sup>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문서·전화 또는 구두 등으로 휴가를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직근 상급기관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하는 재외공관장이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인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장의 휴가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각 재외공관장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재외공관장 본인이 스스로 휴가를 승인하여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재외공관장의 실제 연가 승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앞서 “2항”과 같이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허가 없이 국내 또는 해외에 체류한 재외공관장 중 근무일인 평일을 포함한 기간 동안 국내 또는 제3국에 체류한 3명의 휴가 승인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

1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假), 병가, 공가(公假) 및 특별휴가로 구분됨

## 1) 연가 승인 없이 국내 또는 제3국 체류

ㄱ국 대사 A<sup>11)</sup>, ㄴ 총영사 B<sup>12)</sup> 등 2명의 경우 국내 또는 경유지 체류 기간 중 평일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연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2) 재외공관장이 자신의 연가를 스스로 승인한 후 수기 문서로 편철

재외공관장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재외공관장 본인이 스스로 휴가를 승인하여 수기로 관리함에 따라, ㄷ국 대사 C<sup>13)</sup>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규정과 다르게 경유지 체류 기간에 대한 연가를 스스로 결재하여 수기 문서로 편철하는 방식으로 연가를 승인·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외교부는 위와 같이 재외공관장이 연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스스로 연가를 승인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재외공관장에 대한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sup>14)</sup>

**관계기관 의견** 외교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① 재외공관장의 공무 외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과 관련해서는 공관장들에 대한 복무관리가 보다 엄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특히 제3국 여행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② 재외공관장 휴가의

---

11) [별표 1]의 연번 1번 참고

12) [별표 2]의 연번 1번 참고

13) [별표 2]의 연번 2번 참고

14) 외교부 본부는 소속 공무원들의 휴가를 공무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각 재외공관은 공관마다 우리나라와 표준시간 및 공휴일이 다른 관계로 국가별로 e-사람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면이 있음. 다만, 외교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휴가 관련 기간, 목적지, 연락처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경우 규정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재외공관장의 주재국 내 연가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외교부장관은**

- ① 앞으로 재외공관장이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무 외로 국내 또는 제3국에 체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 ② 재외공관장이 연가를 실시할 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관리·감독함과 동시에 재외공관장의 근무상황부를 작성·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일시귀국 허가 없이 국내에 체류한 재외공관장 현황(2016년도)

연번	공관명 <sup>1)</sup>	공관원명	미허가 체류기간 <sup>2)</sup>	미허가일수	연가승인 여부
1	ㄱ국(대)	A	3. 22., 3. 23.	2일	3. 22~3. 23. 연가대역 없음
2	ㅇ국(대)	H	3. 12., 3. 20.	2일	승인불요(휴일)
3	ㅈ국(대)	I	3. 12., 3. 13.	2일	승인불요(휴일)
4	ㄹ국(대)	D	3. 12.	1일	승인불요(휴일)
5	ㅊ(총)	E	3. 26.	1일	승인불요(휴일)
6	ㅂ(총)	F	3. 6.	1일	승인불요(휴일)
7	ㅅ국(대)	G	3. 26.	1일	승인불요(휴일)
8	ㅇ국(대)	C	3. 12.	1일	승인불요(휴일)

주: 1. (대)는 대사관, (총)은 총영사관

2. 미허가 체류기간은 공관장 회의를 계기로 국내에 체류한 총기간 중 공무상 출장기간 및 일시귀국 허가를 받은 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을 의미함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제3국 여행허가 없이 경유지에 체류한 공관장 현황(2016~2017년도)

연번	연도	공관명 <sup>1)</sup>	성명	미허가 체류기간				연가승인여부
				체류시작일	체류종료일	체류시간	체류장소	
1	2016년	ㄴ(총)	B	3.25.(금) 14:50	3. 28.(월) 16:20	72시간 이상	미국 (로스앤젤레스)	3. 25., 3. 28. 연가내역 없음
2	2016년	ㄷ국(대)	C	3. 19.(토) 16:30	3. 21.(월) 10:50	24시간이상 ~ 48시간미만	영국 (런던)	3. 21. 연가사용내역에 등재
3	2017년	ㅋ(대)	K	12. 23.(토) 18:30	12. 25.(월) 19:00	48시간이상 ~ 72시간미만	프랑스 (파리)	승인불요(휴일)

주: 1. (대)는 대사관, (총)은 총영사관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재구성

# 감 사 원

## 징 계 요 구

제 목 한국학교 대수선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학교

조 치 기 관 ① 교육부 ② 한국복지대학교

내 용

### 1. 사전 개요

○한국학교는 구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및 제39조에 따라 학교 운영비, 시설비, 대수선비 등 필요한 경비를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아 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학교는 2017. 5. 22. □□<sup>15)</sup>(이하 “□□”이라 한다)과 “○한국학교 체육관 및 본관 보수공사”<sup>16)</sup> 계약(계약금액: 미화 160,000달러<sup>17)</sup>, 이하 달러는 “미화” 기준, 공사기간: 2017. 5. 22.~2017. 8. 11., 이하 “2017년 학교 보수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sup>18)</sup>

---

15) 소재지: △, 대표: L

16) 사업내용: 체육관 및 본관 도장(약 6,800㎡, 금액: 109,170달러), 체육관 누수 방지(약 100㎡, 금액: 1,800달러), LED 조명 교체 등(40W LED 76개, 금액: 49,030달러)

17) 원화 1억 8천만 원 상당

1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교육부 지원액 113,114달러(70%)와 자체예산 48,478달러(30%)를 합친 161,592달러(원화 1억 8천만 원 상당)를 관련 예산으로 편성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7. 10. 20. 교육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5항,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sup>19)</sup> 및 제40조 제1항<sup>20)</sup>에 따르면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sup>21)</sup>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사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sup>22)</sup>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재외 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2014년 11월, 교육부 지침) 제2장 I. “학교회계 예산” 및 제3장 III. “학교회계 계약”에 따르면 대수선비를 국고 지원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출 등을 통해 적정 금액을 산출·편성하여 예산 낭비 및 기회비용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을 준용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를 준용

2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하여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을 말함

22)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담당공무원 스스로 위임을 받은 소속공무원 혹은 전문감리회사가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구조, 품질, 수량, 규격, 포장상태 등이 계약내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행위

일부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날로부터 14일 이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등 서류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시설물유지관리 및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다.

더욱이 「재외교육기관 시설비·대수선비 지원·운용 기준」(2016년 5월, 교육부 지침)

2. “예산교부” 및 4. “결과 보고”에 따르면 재외교육기관장은 시설비 또는 대수선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가 등을 적절한 기준과 검토 없이 과다 계상함으로써 공사비가 시공업체에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설비·대수선비 사업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국고지원금의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교육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 추진단계에서 위 학교는 사업비가 과다 산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계약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전문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경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시설물유지관리 및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여야 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준공검사를 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대가 지급 시 하자보증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현금이 아닌 수표 또는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계약금을 지출하고 사업 종료 후 지체 없이 국고지원금의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교육부로 제출하여야 했다.

### 3.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한국복지대학교 ▷처 ▽팀 M은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교육부 <실 ◇정책관 ♥과 N은 2014. 2. 10.부터 2017. 8. 20.까지 각각 ○한국학교 ♠실장 및 교장의 직위에서 2017년 학교 보수공사 계약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였다.

#### 가. M의 경우

##### 1) 대수선비 예산 신청 부당 처리

M은 시설비 또는 대수선비 사업을 추진할 때 노무비 및 재료비 단가 등을 적절한 기준과 검토 없이 과다 계상함으로써 공사비가 시공업체에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게 되어 있는 「재외교육기관 시설비·대수선비 지원·운용 기준」을 숙지하고 있었다.

한편, 교육부는 위 2017년도 학교 대수선비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 신청 시 부적절한 총사업비 산출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 발생 및 국고지원금의 비효율적 집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복수의 견적가격 등 객관적 입증자료에 따라 사업비를 산출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공문을 ○한국학교에 두 차례에 걸쳐 시행(2016. 3. 3.<sup>23)</sup> 및 2017. 1. 5.<sup>24)</sup>)한 바 있다.

따라서 M은 총사업비 산출에 따른 과다 집행 및 국고지원금의 비효율적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업체의 견적가격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소요액만

---

23) 2017년도 재외한국학교 시설비 및 대수선비 수요 조사(2016. 3. 3. 재외동포교육담당관-1257)

24) 2017년 재외교육기관대수선비 예산액 알림 및 교부 신청서 제출 요청(주트국대사)(2017. 1. 5. 재외동포교육담당관-149)

을 요청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M은 2017년 학교 대수선비 사업 예산을 교육부에 신청하기 위하여 □□에 의뢰하여 2016. 3. 14. 제출받은 견적금액(161,592달러, 현지화로 환산시 1,265,265현지화<sup>25)</sup>)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아니한 채<sup>26)</sup> □□이 산출한 견적금액을 그대로 총사업비<sup>27)</sup>로 산정하여 2016. 3. 15. 교육부에 예산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그다음 해인 2017. 1. 29. N의 최종결재를 받아 사업비의 70%<sup>28)</sup> 금액(113,114달러)을 2017. 2. 3. 교육부에 교부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기간(2018. 9. 10.~10. 12.) 중 2017년 학교 보수공사와 동일한 과업으로 현지에 소재한 복수업체에 견적을 요청<sup>29)</sup>한 결과 2018년 10월 두 업체에서 각각 459,000현지화와 1,012,430현지화의 견적금액을 제시하였는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물가상승율(71.15%<sup>30)</sup>)을 적용하여 2016년 3월의 현지화 가치로 환산한 위 견적금액은 각각 268,185<sup>31)</sup>현지화와 591,545현지화로 확인된다.

---

25) 2016. 3. 15. ○한국학교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 “시설비 및 대수선비 예산 신청서”에 기재된 당시 환율 7.83현지화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26) M은 □□의 견적금액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막연하게 적정하게 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

27) 산출 내역을 보면 기본설계비(11,130달러), 건축공사비(111,520달러), 감리비(5,565달러), 기타행정경비(13,887달러), 비품비(19,490달러)으로 구성되어 있음

28) M과 N은 2016. 3. 15. 교육부에 대수선비 사업 예산 신청 시 사업비 161,592달러의 90%인 145,433달러를 요청하였으나, 교육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비 161,592달러의 70%인 113,114달러를 배정하였음

29) 주트국대사관의 청사 보수공사를 실시했던 현지 트국 업체 등 두 곳에 비교견적을 요청

30) 2010년 물가를 100으로 정할 경우 2016년 3월 물가는 167.55이고, 2018년 10월 물가는 286.77임. 따라서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물가상승율은 71.15%임( $286.77 \div 167.55 - 1 = 0.7115$ )

31)  $459,000\text{현지화} \div 1.7115 = 268,185\text{현지화}$ . 이하 동일한 계산 방식 적용

따라서 이를 □□의 견적금액인 1,265,265원지화와 비교해 보면 2016년 3월 기준으로 2017년 예산 신청 견적금액(□□의 견적금액)이 적게는 673,720원지화(86,043달러<sup>32)</sup>)에서 많게는 997,080원지화(127,340달러)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 2) 계약방법 및 계약상대자 선정 부당 처리

M은 위 학교의 시설장으로서 다양한 공사계약 실무를 담당해 오면서 계약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경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M은 2017년 학교 보수공사가 도장 등 시설물유지관리 및 방수공사로 예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sup>33)</sup>이고, 긴급을 요하거나 특정인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수의계약 사유가 없는데도 □□이 ○한국학교의 많은 시설공사들을 시공해 왔고, N이 □□과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는 사유로 2017. 5. 9. 위 “3항 가 1)”의 내용과 같이 과다 산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사업비를 그대로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후 2017년 학교 보수공사 수의계약을 위해 견적을 제출받는다라는 내용을 ○한국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렸다.

더군다나 이처럼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도 M은 □□로 하여금 2017년 학교 보수공사에 대한 견적서류를 제출할 때 다른 업

---

32) 2016년 3월 당시 환율 7.83원지화를 동일하게 적용

33) M은 2017년 학교 보수공사가 막연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면서 「건설산업기본법」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비록 전문공사이더라도 그 당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체의 견적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로부터 □□의 견적서류(견적금액: 160,000달러, 현지화로 환산시 2,884,800현지화<sup>34)</sup>)와 다른 경쟁업체인 ☸☸<sup>35)</sup>의 견적서류(견적금액: 192,956달러)를 제출받았다.

또한, 이후 이를 근거<sup>36)</sup>로 □□을 시공업체로 검토<sup>37)</sup>하여 같은 해 5. 22. N의 결재를 받아 □□과 160,000달러에 2017년 학교 보수공사를 수의계약함으로써 □□에 특혜를 주었다.

한편, 앞서 실시한 2018년 10월 현지의 두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금액인 459,000현지화와 1,012,430현지화를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물가 상승율(26.47%<sup>38)</sup>)을 적용하여 2017년 5월 현지화가치로 환산하면 각각 362,931현지화와 800,529현지화로 계산된다.

따라서 2017년 5월 기준 현지화화로 환산한 □□의 계약금액 2,884,800현지화는 위 두 업체와 비교하여 적게는 2,084,271현지화(115,600달러<sup>39)</sup>)에서 많게는 2,521,869현지화(139,870달러)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 3) 하자담보책임기간 부당 산정

M은 「재외 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시설물유지관리 및 방수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재외 한국학교는 특수한 사정을

---

34) 2017년 5월 당시 환율 18.03현지화로 환산한 금액. 2016년 3월 당시의 환율은 7.83현지화였으나 이후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현지화로 환산한 계약금액이 2016년 3월 예산신청 당시보다 크게 오름

35) 업체명: ☸☸, 대표자명: O

36) □□과 ☸☸가 제출한 견적서류에는 제출 날짜가 □□과의 계약일 이후인 2017. 5. 28.로 되어 있음

37) 낙찰률 99.0%(사업비 161,592달러 대비 견적금액 160,000달러)

38) 2010년 소비자물가를 100으로 정할 경우 2017년 5월 물가는 226.74이고, 2018년 10월 물가는 286.77임. 따라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물가상승율은 26.47%( $286.77 \div 226.74 - 1 = 0.2647$ )

39) 2017년 5월 당시 환율 18.03현지화를 동일하게 적용



감안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보다 2년 짧은 1년으로 정하였다.

한편, 이번 감사기간 중 현지 업체를 통해 2017년 학교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견적서에 있는 체육관 방수 공사와 마룻바닥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외부 도색이 실내용 페인트<sup>40)</sup>로 칠해져 있거나 체육관 벽면 일부가 덜 칠해져 있는 등 도장 공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2017. 8. 12.<sup>41)</sup> ~ 2018. 8. 11.)으로 짧게 정함에 따라 이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과하여 이번에 확인된 하자를 위 학교의 예산으로 보수해야 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 4) 준공검사<sup>42)</sup> 미 실시 등 업무 처리 태만

M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면 계약서 및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등을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준공 검사조서, 하자보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은 뒤 수표 또는 자금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대수선비 사업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국고지원금의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교육부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M은 현지 관행이라는 사유 등으로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

40) 통상 실내용 페인트는 1㎡ 당 60현지화, 실외용 페인트는 1㎡당 80현지화로 가격차가 20현지화 수준임

41) 2017년 학교 보수공사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일 이후부터 1년으로 정함에 따라 공사종료 다음 날인 2017. 8. 12. 부터 2018. 8. 11.까지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해당

42) 위 학교에서 대수선비 교부 신청 시 감리비 예산으로 5,565달러를 총사업비에 포함시켜 배정받았으나 위 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전부 2017년 학교 보수공사 예정금액에 포함

하자보증서<sup>43)</sup> 등 대가지급을 위한 구비서류도 제출받지 않은 채 견적서 또는 계약서대로 공사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하여 2017. 8. 14. N의 결재를 받아 □□에 잔금을 그대로 지급하였다.

또한, M은 N이 공사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유로 □□에 2017. 6. 15. 선수금 48,000달러, 7. 30. 중도금 80,000달러<sup>44)</sup>, 8. 16. 잔금 32,000달러 등 전체 공사 대금 계 160,000달러를 모두 N의 결재를 받아 현금<sup>45)</sup>으로 지급하였고, 국고지원금 집행결과보고서도 교육부에 제출<sup>46)</sup>하지 않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 나. N의 경우

### 1) 대수선비 예산 신청 부당 처리

N은 “3항 가 1)”과 같이 교육부 공문을 통해 학교 대수선비 사업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총사업비 산출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 발생 및 국고지원금의 비효율적 집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N은 총사업비 산출에 따른 과다 집행 및 국고지원금의 비효율적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건 학교 보수공사에 대한 여러 업체의 견적가격 등 객관적 입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소요액만을 요청하여야 했다.

---

43) M은 2017년 학교 보수공사 계약 체결 시 보증기간을 3년이 아닌 1년으로 축소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받았다고 주장은 하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음

44) 2017. 7. 19. 노후버스 매각 대금 15,642달러를 □□에 중도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7. 30.에는 잔여 중도금 64,358달러를 지급

45) 주트국대사관은 청사 도장 공사 대금 지급 시 현지 금융회사(Bank ◎◎)의 수표로 지급하고 있음

46) 감사기간 중 ○한국학교 전임 교장(N)과 전임 ♀실장(M)이 위 공사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2018. 9. 16.에 현직 교장(Q)이 작성·제출하였음

그런데도 N은 M이 □□의 견적금액이 적정한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의 견적금액만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하였는데도 이를 바로잡도록 지시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를 하였다.

이에 따라 “3항 가 1)”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 2) 계약방법 및 계약상대자 선정 부당 처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학교의 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재외 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장 II. 학교회계 지출에 따르면 학교회계의 지출원인행위는 해당 학교의 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N은 M이 2017년 학교 보수공사를 수의계약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N은 M이 2017년 학교 보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다고 보고하자 관련 규정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sup>47)</sup>하였고, □□<sup>48)</sup>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M에게 지시하였다.

또한, M이 계약과정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보다 2년 짧은 1년으로 정하였는데도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이후 M은 N의 지시에 따라 “3항 가 2)”와 같이 □□과 수의계약을 추진하였고, N은 2017. 5. 22. □□ 대표 L와 함께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3항 가 2) 및 가 3)”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

47) N은 자신이 부임하기 전부터 ○한국학교의 많은 시설공사들을 시공해왔고, 대표자가 한국교민이라서 믿고 맡기게 되었다고 진술

48) 교장 N의 임기(2014. 2. 10.~2017. 8. 20.) 중 시행했던 시설공사 11건 중 8건을 □□과 수의계약하였음

### 3) 준공검사 미실시 등 업무 처리 태만

N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자이자 지출원인행위권자인 학교의 장이기 때문에 공사가 종료되었다면 M으로 하여금 공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하게 하도록 지시<sup>49)</sup>하고, 대가 지급 시에도 □□로부터 하자보증서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수표 또는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N은 M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부터 대가 지급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는데도 □□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M에게 지시하였고, 2017. 8. 14. □□에 잔금을 현금<sup>50)</sup>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기안하자,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검사조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가 지급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를 하였다.

이에 따라 “3항 가 4)”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련자 주장 및 판단 M은 총사업비 및 기초금액이 과다 산정된 점, 경쟁입찰

---

49) N의 전임자였던 P(○한국학교 9대 교장, 임기: 2011. 2. 10.~2014. 2. 9.)은 2012년도 ○한국학교 보수공사 완료(2012. 5. 10.) 후에 2012. 5. 2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 대표 L의 입회하에 준공검사 실시 후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50) □□ 대표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자 N은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M에게 지시하였음

대상인데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재외 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장 III. “학교회계 계약”에 ‘재외 한국학교는 현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므로 소재지 현지국가의 학교가 체결하는 계약 법령과 방식에 따르라’는 내용에 따라 현지관행대로 간소하게 계약 업무를 처리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침은 소재국 회계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며, 재외 한국학교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국가계약법과 상충되는 소재국 회계법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가계약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업무를 처리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이 명백하므로 M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N은 총사업비 및 기초금액이 과다 산정된 점, 경쟁입찰 대상인데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2017년 학교 보수공사가 완료된 때(2017. 8. 11.)에는 귀국(2017. 8. 18.)하기 일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업무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M이 계약실무자로서 업무를 잘 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이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준공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자신이 교장으로 재임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M의 업무 처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②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는 대수선비가 지원된 재외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서면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한국학교 대수선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M과 N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 대수선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N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한국복지대학교 총장**은 ○한국학교 대수선비 예산 편성 및 집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M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재외 한국문화원 국유화사업 계약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조 치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내 용

### 1. 업무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및 제51조에 따라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재외 한국문화원의 국유화사업 계약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또한, 주헝가리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2017. 2. 21. ☆☆대학 경영대학원<sup>51)</sup> 건물을 매입(매입금액: 5,030,000유로, 원화 6,661,681,700원 상당<sup>52)</sup>)한 뒤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국유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위해 2016. 11. 8. 헝가리 소재 ●●과 “국유화 프로젝트 시행계약”(계약금액: 39,390,000포린트, 원화 160,317,300원 상당<sup>53)</sup>)을 체결하는 등 [표]와 같이 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51) 소재지: Budapest, 연면적: 7,957㎡, 층수: 지상 6층 및 지하 3층

52) 1유로=1,324.39원(2018. 10. 12. 감사 종료일 서울외국환중개 최종 매매기준율, 이하 동일한 환율 적용)

53) 1포린트=4.07원(2018. 10. 12. 감사 종료일 서울외국환중개 최종 매매기준율, 이하 동일한 환율 적용)



[표] 국유화 사업 관련 계약 명세

계약명	계약 방식	계약일	세부과업내용	계약금액	계약 상대방	계약보증금 수령여부
국유화 프로젝트 시행계약(A)	수의 계약	2016. 11. 8.	컨설팅, 감리, 보고서 작성 업무 등 (매입한 건물의 리모델링사업을 종료 시까지 총괄대행하는 프로젝 트 매니저 업무)	39,390,000포인트 (원화 160,317,300원 상당)	●●	미수령
리모델링 설계용역 계약(B)	공개 경쟁 입찰	2017. 11. 22.	건축설계, 구조설계, 기계설계, 전기설계, 스프링클러설계	168,910유로 (원화 223,702,715원 상당)	■ ■	미수령
기반조성 시행 계약(C)	수의 계약	2017. 12. 18.	철거설계, 측량, 정학조사, 지반 변동조사, 주차장 바닥보수, 철거 작업 기술적 점검, 철거작업, 관리 업무, 철거품질조사, 재정업무 지원 등	473,281,941포인트 (원화 1,926,257,500원 상당)	●●	미수령

주: 주형가리한국문화원 제출자료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9. 3. 법률 제14038호,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2016. 9. 30. 대통령령 제27524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용역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계약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다.

또한, 헝가리 「공공조달법」 제1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도 계약기관은 계약상대방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문화원장 R은 앞서 기술한 [표]와 같이 2016년 7월 국유화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감리, 보고서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유화 프로젝트 시행계약”(A)을 발주하면서, 국내 또는 현지 전자조달시스템 등<sup>54)</sup>에 공고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지 않고 다수 업체<sup>55)</sup>에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견적서 제출을 요구한 후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은 3개 업체<sup>56)</sup>의 견적금액을 비교하여 2016. 11. 8.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헝가리 소재 부동산 개발·건설업체인 ●●과 “국유화 프로젝트 시행계약”(A, 계약금액: 39,390,000포린트, 원화 160,317,300원 상당)을 맺었다.

그리고 R은 2017년 12월 매입건물 일부를 철거하기 위한 “기반조성 시행계

54) 문화원은 “리모델링 설계용역계약”(B) 발주 시 헝가리 내 최대 전자입찰 사이트인 “www.palayzatok.org” 및 문화원 홈페이지에 입찰공고한 사례가 있는 등 헝가리 내 불특정다수에게 공고가 가능함

55) 이메일을 발송하였던 현지 행정직원이 퇴직하여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업체 수는 확인하지 못함

56) ●●, ▼▼, ▲▲

약”(C)을 발주하면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국유화 프로젝트 시행계약”(A)과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 12. 18. “국유화 프로젝트 시행계약”(A) 업체인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두 계약 모두 업체 간 공정한 경쟁 없이 계약되었고, 특히 “기반조성 시행계약”(C, 계약금액: 473,281,941포인트, 원화 1,926,257,500원 상당)의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 “국유화 프로젝트 시행계약”(A)의 약 12배에 이르는데도 다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과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였다.

더욱이 “기반조성 시행계약”(C)의 용역현황을 살펴보면 ●●은 해당 계약의 과업 중 94.6%를 차지<sup>57)</sup>하고 있는 철거작업, 철거설계, 측량업무 등을 모두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 나. 계약보증금 미징구

R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지 않은 채 업무를 추진하여 2017. 11. 22. 앞서 기술한 [표]와 같이 ■■와 “리모델링 설계용역 계약”(B, 계약금액: 168,910유로, 원화 223,702,715원 상당)을 체결하면서, ■■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하지 않았다.

한편, ■■는 ●●과 “기반조성 시행계약”(C)의 일부분인 철거설계용역 하도급 계약을 맺고 부다페스트시의 허가를 받기 위한 외관설계를 하던 중, 문화원이

---

57) ●●이 제출한 견적서에 따르면 총 용역금액 374,262,946포인트(이하 부가세 제외금액) 중 20,326,471포인트(5.4%)에 해당하는 과업(관리업무, 철거품질조사, 재정업무지원)만 ●●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018년 7월 외관설계 변경을 요구<sup>58)</sup>한 것에 대해 ■■는 용역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더이상 인력을 투입할 수 없고 설계의 작품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리모델링 설계용역 계약”(B)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계약이행 담보수단이 없었던 문화원은 이를 수용하여 2018. 8. 8.<sup>59)</sup> 계약을 해지<sup>60)61)</sup>하였다.

그 결과 감사일 현재(2018. 9. 21.) 위 용역의 설계작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당초 ■■와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징구하였다면 헝가리 「공공조달법」 등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계약보증금 최대 8,445.5유로(계약금액의 5%, 원화 11,185,136원 상당)를 국고로 귀속할 수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상실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당시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는 관행을 따랐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 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6. 11. 8.과 2017. 12. 18.에 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더라도 회계연도 내에 계약체결이 가능하였고, 헝가리 「공공조달법」에도 용역유형과 관계없이 5% 이내의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

---

58) 2018. 7. 부다페스트시에서 건물 외관설계를 일부 변경하도록 요구하면서 허가를 반려하였고, 문화원은 시의 요구대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건축비가 추가 소요될 것을 우려하여 건물 일부를 철거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설계업체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외관설계할 것을 요구함

59) ■■가 문화원에 계약해지 통보문서를 발송함

60) “리모델링 설계용역 계약”(B)과 “기반조성 시행계약”(C)의 설계부분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는 두 용역을 하나의 용역처럼 수행함에 따라 문화원에 두 계약의 일괄 해지를 통보하였고, 문화원은 ●●과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함

61) 문화원은 2018. 3. ●●에 “기반조성 시행 계약”(C)의 컨셉설계 납품에 대한 용역대금 11,809,448포인트를 지급하였으나, ■■에 “리모델링 설계용역 계약”(B)의 용역대금은 미지급

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① 앞으로 재외 한국문화원에서 국유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납입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 지도·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외교부

조 치 기 관 외교부

내 용

### 1. 업무 개요

외교부는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예산[운영비(210목)와 업무추진비(240목)로 구성] 등을 재외공관에 배정하여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지침」(외교부) 등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그 집행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관원별 균형적인 예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최저한도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공관원들이 현지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고 경험도 쌓을 수 있도록 위 제도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의 특정 공관원 편중집행 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재외공관은 아래 [표 1]과 같이 공관원별로 할당된 ‘집행최저한도액’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등급(직급)별 집행최저한도액

(단위: 미화 달러)

구분	대상	분기별 최저 한도액
공관원 (주재관 포함)	- 차석대사,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사	850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원	720
	- 9등급 직원	700
	- 6~8등급 직원, 4급 직원	670
	- 5등급, 5급 직원	650
	- 4등급, 6급 이하직원	580
	- 국가정보원, 경찰청 1~2급	220
	- 국가정보원, 경찰청 3~4급	210
	- 국가정보원, 경찰청 5급 이하	19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또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집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주재국의 금융시스템상 법인카드 발급 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재외공관장은 외교활동의 원활화와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집행하면서 접촉한 주요인사에 대한 접촉기록을 지식공유시스템 내에 입력·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인사의 범위는 공관 내규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9. 10.~10. 12.) 중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8개 재외공관<sup>62)</sup>을 대상으로 2016. 1. 1.부터 2018. 8. 31.까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실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 가. 등급별 집행최저한도액 미준수

62) 주이탈리아대사관, 주헝가리대사관, 주타이베이대표부, 주카타르대사관, 주브루나이대사관, 주도미니카대사관, 주시카고총영사관,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주헝가리대사관과 주카타르대사관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 2분기까지 연간 사용액 기준으로 최저한도액 이상 사용한 공관원이 한 명도 없는 등 [별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최저한도액 관련 집행 현황”과 같이 6개 재외공관에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최저한도액 이상 사용한 직원 비율이 연도별로 21.6~29.3%이고, 전체집행액 중 차석대사 이하 공관원의 집행액은 15.1~19.2%<sup>63)</sup>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공관원들이 현지 인적네트워크를 넓히고 외교경험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갖지 못하게 되었다.

#### 나. 개인카드 및 현금 사용

주이탈리아대사관 및 주도미니카대사관이 2016. 1. 1.부터 2018. 8. 31.까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집행한 방법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2,459달러를 집행하면서 40,843달러(21.2%)를 개인카드(5.6%)와 현금(15.6%)으로 집행하였고, 주도미니카대사관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63,279달러를 집행하면서 10,455달러(16.6%)를 개인카드(3.7%)와 현금(12.9%)으로 집행하는 등 위 2개 공관은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데도 해당 금액 및 비율만큼을 개인카드 및 현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63)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지침」 “II. ‘재외공관’ 2.가. 집행최저한도액 집행원칙”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은 공관원별 ‘집행최저한도액’의 내실 있는 시행 등을 통해 공관원 집행비율이 30%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표 2] 개인카드 및 현금 집행액 현황

(단위: 미화 달러, %)

공관명	연도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전체 집행액	개인카드 및 현금 집행액(전체 집행액 대비 비중)		
			개인카드 집행액	현금집행액	계
주이탈리아대사관	2016	82,420	3,832(4.6)	25,267(30.7)	29,099(35.3)
	2017	76,012	6,587(8.7)	3,486(4.6)	10,073(13.3)
	2018	34,027	388(1.1)	1,282(3.8)	1,670(4.9)
	계	192,459	10,807(5.6)	30,035(15.6)	40,843(21.2)
주도미니카대사관	2016	22,116	622(2.8)	3,358(15.2)	3,980(18.0)
	2017	23,159	1,208(5.2)	1,570(6.8)	2,778(12.0)
	2018	18,004	481(2.7)	3,216(17.9)	3,697(20.6)
	계	63,279	2,311(3.7)	8,144(12.9)	10,455(16.6)

자료: 주이탈리아대사관 및 주도미니카대사관 제출자료 재구성

#### 다. 주요인사 접촉기록 미유지

주타이베이대표부 및 주헝가리대사관의 2016년 이후 지식공유시스템 입력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입력 대상이 되는 주요인사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타이베이대표부는 2017. 10. 1. 타이베이 외교부 장관, 상무차관 등과 오찬을 하고도 접촉기록을 입력하지 않는 등 [표 3]과 같이 2016년 이후 총 301건(집행금액: 110,218달러)을 집행하고도 그중 92%에 달하는 277건(집행금액: 97,614달러)의 경우 접촉한 인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있었다.

[표 3]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집행 후 접촉기록 미입력 현황

(단위: 건, 미화 달러, %)

공관명	집행건수	2016년 이후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집행액	미입력 건수	미입력 건수비율	미입력 집행금액
주타이베이대표부	301	110,218	277	92	97,614
주헝가리대사관	177	51,854	106	59.9	36,452
계	478	162,072	383	80.1	134,066

자료: 주타이베이대표부, 주헝가리대사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외교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를 모든 재외공관에 공유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외교부 본부에서 재외공관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 내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외교부장관은 앞으로 재외공관에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집행할 때에는 공관원별 집행 최저한도액을 준수하도록 하고,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데도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접촉한 주요인사에 대한 기록을 입력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재외공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최저한도액 관련 집행 현황**

(단위: 명, 미화 달러, %)

공관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2분기까지)
주헝가리대사관	집행최저기준액 대상 공관원 수	5	6	4
	연간 집행최저기준액 사용 공관원 수 (전체 직원 수 대비 준수인원 비율)	0(0)	0(0)	0(0)
	전체 집행액	19,388	20,750	11,148
	공관원 집행액(전체 집행액 대비 비율)	1,156(6.0)	3,343(16.1)	1,222(11.0)
주타이베이대표부	집행최저기준액 대상 공관원 수	8	10	7
	연간 집행최저기준액 사용 공관원 수 (전체 직원 수 대비 준수인원 비율)	1(25)	1(10)	1(14.3)
	전체 집행액	45,290	39,000	25,890
	공관원 집행액(전체 집행액 대비 비율)	11,575(25.6)	10,784(27.7)	5,104(19.7)
주카타르대사관	집행최저기준액 대상 공관원 수	6	6	6
	연간 집행최저기준액 사용 공관원 수 (전체 직원 수 대비 준수인원 비율)	0(0)	0(0)	0(0)
	전체 집행액	35,100	27,489	7,719
	공관원 집행액(전체 집행액 대비 비율)	2,356(6.7)	1,296(4.7)	915(11.9)
주브루나이대사관	집행최저기준액 대상 공관원 수	3	3	3
	연간 집행최저기준액 사용 공관원 수 (전체 직원 수 대비 준수인원 비율)	1(33)	0(0)	0(0)
	전체 집행액	19,095	15,999	8,319
	공관원 집행액(전체 집행액 대비 비율)	3,566(18.7)	2,146(13.4)	431(5.2)
주시카고총영사관	집행최저기준액 대상 공관원 수	10	13	9
	연간 집행최저기준액 사용 공관원 수 (전체 직원 수 대비 준수인원 비율)	5(50)	5(38.5)	1(11.1)
	전체 집행액	51,044	36,949	13,046
	공관원 집행액(전체 집행액 대비 비율)	16,571(32.5)	8,330(22.5)	3,329(25.5)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집행최저기준액 대상 공관원 수	9	9	8
	연간 집행최저기준액 사용 공관원 수 (전체 직원 수 대비 준수인원 비율)	5(55.6)	6(66.7)	6(75)
	전체 집행액	37,222	31,926	20,754
	공관원 집행액(전체 집행액 대비 비율)	4,630(12.4)	3,743(11.7)	2,134(10.3)
계	집행최저기준액 대상 공관원 수	41	47	37
	연간 집행최저기준액 사용 공관원 수 (전체 직원 수 대비 준수인원비율)	12(29.3)	12(25.5)	8(21.6)
	전체 집행액	207,139	172,113	86,876
	공관원 집행액(전체 집행액 대비 비율)	39,854(19.2)	29,642(17.2)	13,135(15.1)

주: 공관장 및 예산이 외교부에 통합되지 않은 부처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등은 집행최저한도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주헝가리대사관 등 6개 재외공관 제출자료 재구성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청사 보수 공사 계약 및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조 치 기 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내 용

### 1. 업무 개요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은 직원 증원에 따라 2014. 12. 1. 기존 임차 청사<sup>64)</sup> 건물의 1개 층<sup>65)</sup>을 추가로 임차하면서, 청사 내부 수리 등을 위해 2015. 1. 19. 현지 공사업체인 ◆◆<sup>66)</sup>(이하 “◆◆”라 한다)와 ‘청사 확장 공사’ 계약<sup>67)</sup>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계 미화 271,330달러<sup>68)</sup>(원화 3억 1천만 원 상당<sup>69)</sup>, 이하 달러는 미화 기준임)를 지급하는 등 관서운영경비 계 303,625달러<sup>70)</sup>(원화 3억 4천만 원 상당)를 집행하였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64) 소재지: Sao Paulo, 임차면적: 507㎡(9층 일부)

65) 8층 일부(추가 임차 면적: 507㎡)

66) 소재지: Sao Paulo

67) 공사기간: 2015. 1. 16.~2015. 4. 3.

68) 현지화 기준으로 위 공사계약을 체결(계약금액: 713,792.36헤알)한 후 미화 계좌에서 현지화로 환전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69) 미화 1달러=1,142.50원(2018. 10. 12. 감사원 감사 종료일 서울외국환중개 최종 매매기준율, 이하 동일한 환율 적용)

70) 위 청사 내부 수리를 위해 2014. 12. 3. 외교부 본부로부터 지원 받은 공사비 예산 269,797달러, 2014년 말 별도 관서운영경비 이월 잔액 16,913달러, 2015. 4. 8. 외교부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은 예산 20,013달러를 모두 합친 전체 예산금액 306,723달러에서 집행 잔액 3,098달러를 제외하고 위 공사비, 이사비 등으로 최종 집행한 금액

구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2015. 9. 15. 대통령령 제26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지급원인행위 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 15.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4. 2. 14. 법률 제12028호)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등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2014. 4. 30. 외교부 훈령 제26호)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의 집행을 위하여는 미리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급결의서는 영수증과 함께 월별로 편철하여 해당 연도 경과 후 5년간 이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총영사관은 회계연도 내에 지급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관서운영경비의 사용 잔액을 다음 연도 1. 15.까지 외교부 본부에 반납하여야 하고, 계약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위 공사는 일반경쟁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함께 편철하는 등 집행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관서운영경비 예산 부담 이월

그런데 위 총영사관은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2014. 12. 31. ◆◆와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음에도 외교부 본부에 관서운영경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하여 ◆◆에 공사대금 계 286,710.47달러<sup>71)</sup>(원화 3억 2천만 원 상당)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급결의한 후 위 금액을 관서운영경비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였다.

#### 나. 부당 수의계약 체결 등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또한, 위 총영사관은 위 공사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sup>72)</sup> 2015. 1. 19. ◆◆와 수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가항”과 같이 부당하게 이월한 관서운영경비에서 2015. 1. 20.부터 같은 해 5. 29. 사이에 7차례에 걸쳐 공사비 계 271,330달러를 지급하였다.

더욱이 전체 관서운영경비 예산 계 306,723달러에서 위 공사비 지급액 계 271,330달러를 제외한 35,393달러 가운데 32,292달러를 네트워크공사비(18,968달러<sup>73)</sup>), 가구 구입비(6,309달러<sup>74)</sup>), 이사비 등(7,015달러<sup>75)</sup>)으로 각각 추가 집행하면서 가구 구입비나 이사비 등에 대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sup>76)</sup>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도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위 총영사관은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지급원인행위도 없이 허위로 지

---

71) 위 청사 내부 수리를 위해 2014. 12. 3. 외교부 본부로부터 지원받은 공사비 예산 269,797달러와 2014년 말 별도 관서운영경비 집행 잔액 16,913.47달러를 합친 금액

72) 위 공사 계약 담당자는 위 공사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 본부 계약 담당자로부터 일상감사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달받아 공관장에게 필요한 절차를 지킴으로써 건의하였으나 공관장은 공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사유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

73) 현지화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54,269.57헤알)한 후 미화 계좌에서 현지화로 환전하여 지급한 금액

74) 현지화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20,000헤알)한 후 미화 계좌에서 현지화로 환전하여 지급한 금액

75) 현지화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21,109.58헤알)한 후 미화 계좌에서 현지화로 환전하여 지급한 금액

76) 2014. 12. 31. 286,710.47달러를 허위로 지급결의함에 따라 이후 실제 해당 금액을 가구 구입비, 이사비 등으로 사용할 때에는 다시 지급결의를 하지 못함

급결의서를 작성하여 관서운영경비를 부당하게 이월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관서운영 경비 집행 관련 증빙관리도 소홀히 하는 등 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

**관계기관 의견**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예산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주상파울루총영사는 앞으로 지급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관서운영경비를 부당하게 이월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서운영경비 증빙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청사·관저 이전 사업 관련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주카타르대사관

조 치 기 관 주카타르대사관

내 용

### 1. 업무 개요

주카타르대사관은 2010. 7. 26. 카타르 정부로부터 청사 및 관저 이전을 요청 받아 2011. 4. 14. 구 청사 및 관저의 건물 보상금으로 23,211,485카타르리얄(원화 72억 원 상당<sup>77)</sup>)을 지급받기로 카타르 정부와 합의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위 관서는 전체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하지않고 청사 및 관저 신축 이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역비 및 공사비만큼을 해당 업체에 순차 적으로 지급한 후 잔액 발생 시 위 대사관에 이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카타르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는 것으로 외교부 본부 협의 등을 거쳐 청사 및 관저 신축 이전 사업 (설계 및 공사기간: 2013. 4. 8.~2016. 9. 30.)을 추진하였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

77) 1카타르리얄=311.18원(2018. 10. 12. 감사원 감사 종료일 서울외국환중개최종 매매기준율, 이하 동일한 환율 적용)



지출은 세출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3조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sup>78)</sup>

따라서 위 대사관은 비록 카타르 정부 측의 요청을 수용하여 카타르 정부가 청사 및 관저 신축공사 용역 및 공사업체에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더라도, 「국가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용역비 및 공사비 세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정당한 회계처리 절차를 거쳐 용역 및 공사업체에 지급하고, 보상금 총액만큼의 세입 예산 또한 별도로 편성하여 용역 또는 공사업체에 지급된 보상금은 용역 또는 공사업체를 통해, 보상금 잔액은 카타르 정부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국고에 납입<sup>79)</sup>하여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대사관은 청사 신축을 위한 별도의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2013. 3. 28. 주식회사 ♠♠와 “주카타르(대) 청사·관저 이전사업 PM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3. 6. 6. 설계비(선금) 1,135,371카타르리얄(원화 3억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해줄 것을 카타르 정부에 요청하는 등 [별표] “청사·관저 신축 용역비 및 공사비 직접 지급 명세”와 같이 2013. 6. 6.부터 2016. 12. 21. 사이에 총 14차례에 걸쳐 보상금 계 23,185,764카타르리얄(원화 72억 원 상당)을 카타르 정부로 하여금

---

78) 또한,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운영지침」(2013년 1월, 외교부 지침) 제5장 ‘예산 및 회계처리’ 2. ‘회계 처리’에 따르면 국유화사업의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출납계산서 작성, 지출 관련 증거서류 편철·보관 등 회계처리 절차는 관서운영경비 처리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는 미리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집행하되 지급결의서는 영수증과 함께 월별로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징수 등 수입금의 변동사항은 결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79) 「국유재산법」 제26조의3 및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이 되도록 되어 있음

직접 용역 및 공사업체에 지급하도록 각각 요청함에 따라, 지급결의서 작성 등 세출 예산 집행을 위한 회계처리는 물론 용역 및 공사업체에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세입금 국고 납입과 관련한 회계처리 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위 대사관은 당초 보상금 계 23,211,485카타르리얄에서 위 용역 및 공사비 지급 요청액 계 23,185,764카타르리얄을 제외한 보상금 잔액 25,721카타르리얄(원화 8백만 원 상당)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18. 7. 15.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카타르 정부와 합의하여 2018. 10. 12. 감사원 감사일 현재<sup>80)</sup> 이에 대한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주카타르대사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보상금 잔액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주카타르대사는 앞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당한 회계처리 절차도 없이 청사 및 관저 이전 사업 등 국유화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국유화 사업 관련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80) 주카타르대사관은 감사 종료 이후인 2018. 11. 27. 카타르 정부로부터 보상금 잔액 25,721카타르리얄을 지급 받음

[별표]

청사·관저 신축 용역비 및 공사비 직접 지급 명세

연번	구 분	지 급 처	지급 요청일	지급 요청 금액		비 고
				카타르리알(QAR) 기준	미화 달러(\$) 기준	
1	PM 용역 (설계 포함)	(주)♠♠	2013. 6. 6.	1,135,371	312,000	설계비 (30%)
2			2013. 8.28.	334,788	92,000	설계비 (20%)
3			2014. 3.24.	669,577	184,000	설계비 (40%)
4			2015. 5.28.	167,394	46,000	설계비 (10%)
5			"	316,593	87,000	PM 용역비
6			2016. 3.17.	316,593	87,000	
7			2016. 6. 9.	316,593	87,000	
8				316,593	87,000	
9				211,064	58,000	
10	공사	(주)♣♣	2015. 3.17.	5,591,040	1,536,000	공사선금
11			2016. 2.16.	3,132,038	860,450	1차 기성금
12			2016. 6. 5.	3,466,419	952,313	2차 기성금
13			2016.10.19.	3,739,728	1,027,398	3차 기성금
14			2016.12.21.	3,471,973	953,839	잔금
합계				23,185,764	6,370,0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재해보험금 미청구 및 회계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주네덜란드대사관

조 치 기 관 주네덜란드대사관

내 용

### 1. 업무 개요

주네덜란드대사관은 청사 건물에 대하여 ♥♥<sup>81)</sup>와 매년 재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청사 재해보험 계약 현황

(단위: 유로)

보험명	보험사명	주요 보장 내용	계약 기간	연간 보험료	보상범위
청사 건물 재해 보험	♥♥	화재, 폭풍, 폭우 등으로 인한 건물 손상 보상	2016. 12. 16. ~ 2017. 12. 15.	2,367.25	3,009,000
			2017. 12. 16. ~ 2018. 12. 15.	2,443.64	3,106,100

자료: 주네덜란드대사관 자료 재구성

81) 소재지: Haag, Netherland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구 「국고금 관리법」(2017. 12. 28. 법률14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및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재외공관의 장이 그 수입금 및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2017. 5. 10. 외교부 훈령 제85호, 이하 같다)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공관장은 재외공관 청사·관저·차량 등 국유자산 등에 대한 피해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재외공관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소속 장관에 직접 사용을 승인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의 집행을 위하여는 미리 지급결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험금을 수령하여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복구공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미리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집행하였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보험금 집행 부적정

위 관서는 2017. 6. 23. 청사 내 낙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표 2]와 같

이 복구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험회사로부터 총복구비용 6,252.98유로 중 보험 약관상 자부담분 500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5,752.98유로를 2차례<sup>82)</sup>에 걸쳐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런데 위 관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위 보험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청사 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관서운영경비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보험금 수령액 전액을 별도의 지급 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서 [표 2]와 같이 ★★ 등 3개 업체에 복구 공사 비용으로 집행하였다.

[표 2] 낙뢰피해 복구 현황

(단위: 유로)

공사명	업체명	공사내용	공사 기간	공사 계약일	공사비 지급일	공사금액
낙뢰피해 복구공사	★★ <sup>1)</sup>	지붕, 축대, 펜스, 메일박스 수리	2017. 7. 13. ~ 8. 2.	2017. 6. 29.	2017. 8. 30.	2,335.30
	◎◎ <sup>2)</sup>	전등 및 폴대 교체, 전기 배선 수리	2017. 8. 2. ~ 8. 5.	2017. 7. 17.	2017. 8. 30.	578.08
	■ <sup>3)</sup>	쓰러진 나무 처리	2017. 6. 22. ~ 6. 23.	-	2017. 8. 24.	3,339.60
합계						6,252.98

주: 1. 소재지: Haag, Netherland

2. 소재지: Haag, Netherland

3. 소재지: Haag, Netherland

자료: 주네덜란드대사관 자료 재구성

82) 1차: 2017. 7. 31. 2,413.38유로, 2차: 2017. 8. 14. 3,339.60유로

## 나. 피해보험금 미청구

주네덜란드대사관은 2018. 1. 18. 폭풍으로 청사 지붕 타일이 유실됨에 따라 [표 3]과 같이 2018. 1. 19. 지붕 전문 보수 업체인 ◆◆<sup>83)</sup>을 통해 긴급 임시 조치 후 같은 해 2. 13. 청사 지붕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5. 지붕 보수를 완료하였다.

[표 3] 청사 지붕 보수공사 현황

(단위: 유로)

공사명	업체명	공사내용	공사계약일	공사 기간	공사비 지급일	공사금액
청사지붕 긴급 보수	◆◆	타일 유실부분 방수 포 설치 및 고정	2018. 1. 18.	2018. 1. 19.	2018. 2. 7.	657.94
청사 지붕 보수		작업용 사다리 등 설치, 임시 보수 물 질 제거, 지붕타일 부착 및 구간 접착 작업	2018. 2. 13.	2018. 6. 13.~ 6. 15.	2018. 6. 22.	7,804.50
계						8,462.44

자료: 주네덜란드대사관 자료 재구성

한편, 위 관서는 피해 당시 ♥♥와 화재, 폭풍, 폭우 등에 의한 건물손상 시 보상을 위한 청사 재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따라서 폭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 4]와 같이 재해보험 약관 E.G.3.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 처리에 관한 협의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83) 소재지: Leidschendam-Voorburg, Netherland

[표 4] 재해보험 약관 내용(피해보장 범위)

<p>Polismantel E.G.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ofdstuk 2 Omschrijving van de dekking</li> <li>- Artikel 3 Gedekte gebeurtenissen</li> </ul> <p>3.6. Stor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ieronder te verstaan de windkracht bij een windsnelheid van ten minste veerien meter per seconde.</li> <li>- Onder deze dekking valt ook schade door neerslag als gevolg van stormschade aan het gebouw.</li> </ul>	<p>보장 약관 E.G.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조 보장의 정의</li> <li>- 3항 보험 보장의 범위</li> </ul> <p>3.6. 폭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풍은 풍속이 최저 14m/s에 이른 것을 말한다.</li> <li>- 폭풍에 동반하는 폭우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도 보험 보장 범위에 속한다.</li> </ul>
--	---

자료: 주네덜란드대사관 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관서는 2018. 1. 18. 강풍으로 청사 지붕 타일이 손상되는 등으로 복구 공사 비용 계 8,462.44 유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2018. 9. 14. 감사원 감사일 현재<sup>84)</sup>까지 보험사에 피해 상황을 통보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주네덜란드대사관은 감사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감사 지적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2018. 10. 30. 자로 보험 약관상 자부담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총 5,859.75유로를 지급받아 2018. 11. 6. 수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향후 재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즉시 요청하여 수입금으로 계상하고, 「국고금 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주네덜란드대사는 앞으로 외교부장관의 승인이나 지급결의 없이 보험금 수령액을 공사비용으로 직접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청사 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피해 발생 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84) 주네덜란드대사관은 감사 종료 이후인 2018. 11. 6. 보험사로부터 5,859.75유로를 지급 받음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활동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주시카고총영사관 ②주네덜란드대사관

조 치 기 관 ①주시카고총영사관 ②주네덜란드대사관

내 용

### 1. 업무 개요

주시카고총영사관과 주네덜란드대사관은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2018. 3. 14., 외교부 훈령 제99호, 이하 같다) 등에 따라 관내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방문 면담, 주기적인 수감자 명단 확보 등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영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주재국 관계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재외국민 또는 관계당국과의 접촉을 통해 그 신원과 체포·구금의 사유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대사관 등은 재외국민이 주재국 관계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면담 등의 방식으로 인적사항과 그 체포·구금의 사유를 파악하여야 했다.

또한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관내 행형당국

에 대하여 분기별(2018. 3. 14. ‘주재국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반기별로 요청’하는 것으로 규정 개정함)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명단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대사관 등은 수감된 재외국민이 장기간 영사조력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수감 중인 재외국민 명단을 관내 행형당국에 요청하여 송부 받았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재외국민 수감자 신원 파악 업무 처리 부적정

그런데 주시카고총영사관은 불법체류로 적발되어 2015. 5. 2.부터 관내인 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S에 대한 구금 사실을 같은 해 5. 4. 미국출입국관리사무소(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로부터 유선으로 통보받았으나 이후 구금 사유 파악이나 면담 등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주네덜란드대사관은 절도죄로 적발된 재외국민 1명(인적사항 모름)에 대한 구금 사실을 2018. 8. 27. 네덜란드 법무부로부터 전자메일로 통보받았음에도 이후 구금자 인적사항과 구금 사유를 파악하지 않는 등 네덜란드 법무부로부터 2017. 7. 20. 이후부터 감사원 감사일(2018. 9. 13) 현재까지 재외국민 총 4명이 체포·구금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구금자 인적사항과 구금 사유 파악 등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S는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2015. 8. 13. 불법체류를 이유로 미국에서 강제 출국되는 등 총 5명<sup>85)</sup>의 재외국민이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복역하거나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강제 출국되었다.

#### 나. 재외국민 수감자 명단요청 업무 처리 부적정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9. 10. ~ 10. 12.) 중 확인한 결과 주네덜란드대사관은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이 제정된 2015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규정에 따라 분기마다 네덜란드 행형당국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명단을 총 13회<sup>86)</sup> 요청해야 함에도 그중 4회<sup>87)</sup>만 요청하였다.

그 결과 주네덜란드대사관은 관내 수감된 재외국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sup>88)</sup> 수감된 재외국민이 장기간 영사조력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주시카고총영사관과 주네덜란드대사관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영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주시카고총영사와 주네덜란드대사는 앞으로 주재국 관내 수감 중인 국민의 신원을 지체 없이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행형당국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명단을 요청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영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85) 주네덜란드대사관 관내 수감자 4명(성명 모름)과 주시카고총영사관 관내 수감자 1명(S) 등 총 5명

86) 13회=3회(2015년)+4회(2016년)+4회(2017년)+2회(2018년)

87) 2016년 1분기, 2017년 3분기 2회, 2018년 하반기

88)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2018. 9. 10. 주네덜란드대사관의 관내 수감자 파악 결과 2명의 수감자 확인(성명 모름, 1명은 병원 치료 중)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재외국민 사건·사고 보고 불철저 및 영사민원시스템 등록·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조 치 기 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내 용	

### 1. 업무 개요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은 영사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고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이하 “e-Consul”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그 개요와 조치결과 등을 외교부 본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재외국민 사건·사고 발생 시 관련 현황을 e-Consul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 제13조,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이 관련된 사건·사고를 e-Consul에 정확히 반영하고, 재외국민 수감자가 출소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e-Consul 조치사항에 출소일자를 기재한 후 종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관장은 사건·사고 및 수감자 담당영사가 e-Consul 사건·사고 및 수감자 입력을 누락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총영사관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그 개요와 조치결과 등을 외교부 본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사건·사고 및 수감자 현황 등을 e-Consul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왜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총영사관은 2015. 1. 1.부터 2018. 9. 14. 사이에 [별표] “재외국민 사건·사고(수감자) 본부 보고 및 e-Consul 수감자 관리 현황”과 같이 10명(동일인인 T 중복 제외)의 재외국민 사건·사고(수감자) 발생을 인지하였다.

그런데 위 총영사관은 외교부 본부에 U 등 6명<sup>89)</sup>(주브라질대사관에서 보고한 V, W 포함)의 사건·사고 개요와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였으나, X 등 4명<sup>90)</sup>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Y 등 4명<sup>91)</sup>은 석방 또는 출소하였는데도 e-Consul에는 종결(석방)로 처리하지 않고 처리 중(수사 중, 재판 중, 수감)으로 입력·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H 교도소에 수감 중인 Z의 경우 동일인인데도 e-Consul에 Z와 T로 중복 입력·관리하면서 수감일을 잘못 입력<sup>92)</sup>하고 있었고, V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생

---

89) U, AA, Y, V, W, AB

90) X, AC, Z, AD

91) Y, AC, V, W

92) 2017. 10. 26.을 2017. 10. 6.로 잘못 입력

년월일이 잘못 입력<sup>93)</sup>되어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사건·사고(수감자) 발생 시 즉시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고, 사건 종결 시 e-Consul에 등록하여 완결 처리하며, 수감일 등을 e-Consul에 잘못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주상파울루총영사는 앞으로 사건·사고 발생을 인지하는 경우 외교부 본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관련 현황 등을 재외국민 영사민원시스템(e-Consul)에 정확히 반영하여 왜곡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93) -을 -로 잘못 입력

[별표]

재외국민 사건·사고(수감자) 본부 보고 및 e-Consul 수감자 관리 현황

연번	수감자 성명	생년월일	사건유형 (범죄명)	접수날짜 (인지날짜)	본부 보고일	수감일	퇴소일	처리상태
1	U	-	살인미수	2015. 2. 12.	2015. 2. 14.	2015. 2. 10.	2015. 2. 20.	종결(석방)
2	AA	-	마약운반	2015. 3. 11.	2015. 3. 17.	2015. 3. 10.	2015. 8. 27.	종결(석방)
3	X	-	마약소지	2015. 5. 21.	미보고	2015. 4. 25.	2016. 5. 9.	종결(석방)
4	Y	-	탈세	2015. 9. 30.	2015. 10. 3.	2015. 9. 30.	2015. 10. 5.	처리 중 (수사 중)
5	AC	-	폭행, 상해	2016. 8. 2.	미보고	2016. 7. 20.	2018. 5. 22.	처리 중 (재판 중)
6	V <sup>1)</sup>	-	사기	2016. 10. 4.	2016. 10. 29.	2016. 10. 4.	2017. 6. 8.	처리 중 (재판 중)
7	W	-	사기	2016. 10. 4.	2016. 10. 29.	2016. 10. 4.	2016. 12. 20.	처리 중 (재판 중)
8	Z <sup>2)</sup>	-	뇌물공여	2017. 11. 16.	미보고	2017. 10. 26.	수감 중	처리 중 (수감)
9	T <sup>2)</sup>	-	미신고 물품 반입	2017. 10. 6.	미보고	2017. 10. 26.	수감 중	처리 중 (수사 중)
10	AD	-	금지약물반입	2018. 6. 12.	미보고	2018. 6. 12.	수감 중	처리 중 (수사 중)
11	AB	-	마약운반	2018. 8. 9.	2018. 8. 15.	2018. 8. 9.	수감 중	처리 중 (수사 중)

주: 1. V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이 -인데 -로 잘못 입력

2. Z과 T은 동일인이며, 수감일이 2017. 10. 26.인데 2017. 10. 6.로 잘못 입력

3. 발생 기간: 2015. 1. 1. ~ 2018. 9. 14.

자료: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자료 재구성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사증발급규제자에 대한 사증 발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주후쿠오카총영사관 ②주호치민총영사관
조 치 기 관	①주후쿠오카총영사관 ②주호치민총영사관
내 용	

### 1. 업무 개요

주후쿠오카총영사관과 주호치민총영사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사증 등을 발급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하 “사증발급 규제자”라 한다)인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고, 사증발급규제자에게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외공관 사증발급 오류사례 분석”(2013년 1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IV. ‘건의 및 협조 요청사항’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시 업무담당자는 반드시 법무부 출입국정보시스템(IVIS)에 접속하여 사증발급규제자 여부를 검색하도



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총영사관은 사증발급 여부를 심사할 때 사증발급규제자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사증을 발급하여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의 경우

그런데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여권위조로 적발되어 2013. 8. 9.부터 10년간 입국 금지 중이던 몽골인 AE에 대하여 법무부 출입국정보시스템의 사증발급규제자 조회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2017. 2. 9. 일반관광 사증(C-3-9)을 발급하였다.

#### 나. 주호치민총영사관의 경우

그리고 주호치민총영사관은 위조·변조 여권을 소지하여 국내로 입국하려다가 적발되어 2016. 4. 15.부터 10년간 입국규제 중이던 AF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사증발급규제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17. 5. 29.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사증발급규제자에게 결혼사증(F-6-1)을 발급하는 등 [표]와 같이 총3명의 사증발급규제자에게 결혼사증(F-6-1) 또는 관광사증(C-3-9)을 발급하였다.<sup>94)</sup>

---

94) “3항 가”의 AE는 2017. 2. 22. 우리나라 입국 시 사증발급규제자로 적발되는 등 “3항 가~나”에 실시된 사증발급규제자 4명은 모두 입국 거부

[표] 사증발급규제자에 대한 사증발급 내역

연번	이름	생년월일	사증발급규제 기간		사증발급일	국적	체류자격	입국불허일
			규제시작일	규제종료일				
1	AF	-	2016. 4. 15.	2026. 4. 14.	2017. 5. 29.	베트남	F-6-1	2017. 6. 13.
2	AG	-	2016. 7. 13.	2023. 4. 2.	2018. 2. 8.	베트남	F-6-1	2018. 3. 2
3	AH	-	2013. 10. 6.	2023. 10. 5.	2017. 10. 12.	베트남	C-3-9	2017. 10. 21.

자료: 주호치민총영사관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감사결과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사증 심사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증발급규제자 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② 주호치민총영사관은 감사결과에 일부 이견을 제기하면서 2018년 3월경까지는 사증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때 법무부 출입국정보시스템(IVIS)에서 제공하는 사증발급규제자 정보 등이 통합사증발급시스템과 제대로 연동이 되지 않아, 통합사증발급시스템에서 사증발급규제자 정보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주호치민총영사관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재외공관 사증발급 오류사례 분석”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증발급 담당자는 사증 신청자의 정보를 법무부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별도로 조회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쳤더라면 위 3명이 사증발급규제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주후쿠오카총영사와 주호치민총영사는 입국이 금지 또는 거부된  
외국인에게 사증이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사증 심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  
니다.(주의)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명예(총)영사 추천 부적정

소 관 기 관 주브라질대사관

조 치 기 관 주브라질대사관

내 용

### 1. 업무 개요

주브라질대사관은 영사관할구역인 브라질리아 등 20개 주(州) 중 재외국민과 우리나라 주재국 진출기업의 보호 필요성이 큰 지역인 ㄱ주 등 3개 주<sup>95)</sup>에 대하여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2015. 6. 15. 대통령령 제26314호, 이하 같다) 제2조 등에 따라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를 추천하여 외교부장관의 임명과 주재국의 인가를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명예영사는 주재할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명예영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

95) ㄱ주, ㄴ주, ㄷ주

따라서 재외공관의 장은 명예영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자 등을 명예영사로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명예영사가 공석 중인 경우 한인회, 주재국의 우리 기업뿐 아니라 주재국 외교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명예영사를 적극 발굴하여 재외국민 보호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대사관은 2015. 4. 28. 브라질 ㄱ주 주지사와 상원의원 등을 지낸 AI로부터 자신을 ㄱ주 명예영사로 추천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한편, 위 사람이 ㄱ주 상원의원이던 2007. 11. 20. 당시 브라질 연방검찰청에 의해 “횡령 및 돈세탁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 혐의 및 기소 사실이 같은 해 11. 22. 브라질 일간지 △△ 등에 보도된 바 있었다.

따라서 위 대사관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위 사람의 기소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추천 과정에서도 위 사람이 명예영사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위 대사관은 이러한 검증 없이 2015. 9. 9. 외교부 본부에 위 사람<sup>96)</sup>을 ㄱ주 명예영사로 추천하였고, 외교부 본부는 같은 해 10. 14. 위 사람의 명예영사 신규 임명을 대사관에 통보하였다.

---

96) 위 사람이 제출한 2015. 10. 9. 연방경찰 및 ㄱ주 경찰 발행 범죄경력증명서상에는 확정된 범죄경력만 조회되므로 기소 중인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위 사람은 명예영사로 임명<sup>97)</sup> 된 지 2개월이 지난 2015. 12. 16. 재판 결과 20년 10개월의 징역형(1심)을 선고받았고, 항소심(2심) 중인 2018. 4. 25. 형사재판<sup>98)</sup> 등을 사유로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그 결과 외교부 본부는 2018. 5. 17. 위 사람을 해임하였다.

한편, 2012. 11. 29.<sup>99)</sup> 이후 공석인 ㄸ주 명예총영사의 경우 주브라질대사관은 2016년에 ㄸ주 전 태권도 연합회장(AJ)을 한인회를 통해 추천받았으나 위 사람의 활동이 태권도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유로 명예영사로 추천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위 대사관은 한인회와 주재국의 우리 기업을 통해서만 명예영사를 추천받고 있을 뿐 주재국 외교부 등을 통해 명예영사 적임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위 대사관은 ㄸ주 명예총영사가 공석이 된 2012. 11. 29. 이후 2018. 9. 21. 감사원 감사일 현재까지 5년 9개월 이상 ㄸ주 명예총영사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주브라질대사관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명예영사를 임명할 경우 추천 과정에서 기소 중인 자 등 부적격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한인회와 주재국의 우리 기업 외에도 주재국 외교부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명예영사 적임자를 발굴해 조속히 임명되도록 하겠다는

---

97) 2015. 10. 23. ~ 2020. 10. 22.

98) 2018. 5. 22. 항소심 재판 결과 20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음 날인 같은 해 5. 23. 법정구속됨

99) 1999. 3. 3. 임명된 명예영사 AK가 2012. 11. 29. 의원면직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주브라질대사는 앞으로 명예영사를 추천할 때 기소중인 자 등 부적격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석 중인 명예총영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임자를 적극 발굴하여 임명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및 제청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주호치민총영사관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조 치 기 관	① 주호치민총영사관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내 용	

### 1. 업무 개요

주호치민총영사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로부터 제16기, 제17기 및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sup>100)</sup>를 받고 각각 사무처에 주재국 재외동포 49명, 52명 및 50명을 후보자로 추천<sup>101)102)</sup>하였다.

한편, 사무처는 위 후보자와 사무처의 사무처장이 제청<sup>103)</sup>한 후보자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위촉 후보자로 선정한 후 대통령의 재가<sup>104)</sup>를 받아 임기 2년의 해외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2.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사무처가 2013. 3. 26. 시행한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

100) 추천의뢰일: 제16기 2013. 3. 26., 제17기 2015. 3. 16., 제18기 2017. 3. 8.

101) 추천일: 제16기 2013. 4. 15., 제17기 2015. 4. 17., 제18기 2017. 4. 24.

10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함

10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근거함

1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자문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함



후보자 추천 안내」(2013년 3월 사무처 지침)와 2017. 3. 8. 시행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8기 해외 자문위원 위촉 세부 추진계획(안)」(2017년 3월 사무처 지침)에 따르면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등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로 추천하되, 부도덕한 사생활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은 추천에서 제외하고 위촉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총영사관은 교민사회에 물의를 빚고 우리나라와 주재국 간에 외교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을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사무처도 이와 같이 교민사회에 물의를 빚고 국격(國格)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로 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주호치민총영사관의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부적정

위 총영사관은 2013. 4. 15. 재외동포 AL를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한편, AL는 국제결혼 알선업에 종사하면서 동서 등과 함께 2006년 8월과 9월에만 베트남 사법부가 발행하는 결혼증명서 97건<sup>105)</sup>을 위조하여 총영사관에 거주사증(F-2, 결혼)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결혼정보 업계와 교민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등 상습적으로 베트남 정부의 서류를 위조하여 자칫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위 총영사관은 2006. 11. 6.부터 같은 해 12. 6. 사이에

---

105) 위 총영사관이 적발한 2006년 8월분 및 9월분 위조서류 총 103건 중 94%에 해당함

2006년 8월분과 9월분 거주사증 신청서류들을 추적 조사하여 AL의 위 범죄 사실을 파악하였고, 외교부 본부 등에 2007. 1. 11. “국외도피사범 소재발견 보고” 및 “베트남 결혼증명서 위조서류 조사 중간보고”를 통해 보고하였다.

또한, 위 총영사관은 2007. 1. 23. AL가 베트남 사법부가 발행하는 혼인증서와 우리나라 호적초본(현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위조하여 결혼 비자를 신청하였고, 위와 같이 서류를 위조하여 우리나라로 입국시킨 베트남인 신부들이 1천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 사람의 범죄에 대한 사건 개요를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e-Consul)에도 입력하여 관리하였다.

이 외에도 위 총영사관은 2010. 8. 6. “위조문서 등 제출 혼인신고 사례 접수 보고” 및 2012. 3. 23. “신원부적합자(AL) 입국 예정보고”를 통해 2010년 7월 한국인 남편(AM)과 베트남인 신부(AN)가 혼인신고를 위해 베트남 벤제성 사법부에 제출한 위조된 베트남 혼인증명서에 AL가 관련되었다는 사실과, AL의 여행증명서<sup>106)</sup> 발급 과정에서 AL가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외교부 본부 등에 보고하였다.

이처럼 위 총영사관은 AL의 범죄 사실을 수차례 확인하고 내부 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한편 외교부 본부 등에 보고하였다.

그런데도 위 총영사관은 2013. 4. 15. 사무처에 베트남 결혼증명서와 우리나라 호적초본 등을 상습적으로 위조하여 물의를 빚은 AL를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sup>107)</sup>로 추천하였다.

---

106) 긴급하거나 특수한 경우의 해외여행자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로 여권을 대신함

107) 위 총영사관은 2013. 4.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해외 자문위원 추천위원회(위원장: AO 총영사)를 개최하여 AL 등 49명의 후보자를 선정함

이에 사무처는 2013. 6. 21.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AL를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임기: 2013. 7. 1.~2015. 6. 30.)으로 위촉하였고, 같은 해 6. 22. 위 총영사관에 위촉 사실을 통보하였다.

#### 나. 사무처의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제청 부적정

한편, 위 총영사관은 AL를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후 2년이 지난 2015. 4. 17. 사무처에 다시 AL를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그러나 위 총영사관이 2015. 4. 21. 시행한 “민주평통 제17기 자문위원 후보 추천 관련” 공문에 따르면 “3항 가”의 제16기 자문위원 추천과는 달리 AL가 베트남에서 결혼중개업을 하면서 수십 명의 백지 여권을 휴대하고 캄보디아에 입국하다가 우리나라 경찰의 검거 요청에 따라 2007. 5. 25. 캄보디아 경찰에 검거되어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및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고 프놈펜교도소에서 수감되었고, 업무상과실치사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1998. 9. 29.),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2008. 9. 9.)의 주요 전과기록이 있으므로 해외 자문위원 위촉 후보자 선정에 참고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사무처는 2015년 6월 AL를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위촉 후보자 최종 선정에서 배제하였다.

그런데 사무처는 2년 후 2017년 8월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위촉 후보자를 선정하면서 AL<sup>108)</sup>를 다시 사무처장 제청 후보자로 최종 선정

---

108) 위 총영사관은 2017. 4. 24.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50명) 추천 시 AL

109)하여 같은 해 8. 17.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임기: 2017. 9. 1.~2019. 8. 31.)으로 위촉하였고, 같은 해 8. 18. 위 총영사관에 위촉 사실을 통보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주호치민총영사관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2019년에 있는 제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추천 시 감사결과를 유념하여 부적격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무처도 마찬가지로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2019년에 추진하는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위촉 시 사무처장이 제청한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중 부적격자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주호치민총영사는 앞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을 추천할 때 부적격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앞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을 제청할 때 부적격자를 제청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를 추천하지 않음

109) 사무처는 2017. 7. 20 이메일로 위 총영사관에 사무처장 제청 후보자(AL 포함 13명)의 자문위원 위촉 결격 기준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을 요청하였고, 위 총영사관으로부터 같은 해 7. 21. 및 7. 25. 회신받은 이메일에서 AL에 대한 언급이 없자 같은 해 8월 사무처장 제청 후보자로 최종 선정